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정치적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관세법 제 51조 등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부과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3.3.27.(월) 헤럴드경제

“한일 관계 정상화에 중국산 반덤핑관세 때리기?”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